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0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임미애 · 염태영
권칠승 · 안도걸 · 이상식
정준호 · 강경숙 · 이기현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·보존 선박 등(이하 “장기계류선박”이라 함)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·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·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·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4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·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(출입검사·보고 등) ① ~ ③ (생 략)	제115조(출입검사·보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 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<u>경우에는</u>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 ·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 설·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 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·계류</u> <u>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</u> <u>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</u> <u>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</u> <u>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